

이번호 둘러보기

- 1 인사말
- 2 이름뿐인 녹색성장
- 4 원전 후보지 선정 갈등
- 6 [단체소개]
기후변화에너지대안 센터
- 7 [날씨 이야기]
온난화와 한반도 한파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

사무국: 광주환경운동연합
Kwangju@kfem.or.kr

편집 : 이지언

번역 :
 (한중) 金龙军, 于金卉, 吴东建
 (한일) 石井晋平, 葛西
 麻衣子, 原田静香, 全美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새해 초부터 우리 동북아시아에 엇비슷하게 „기록적인 한파“와 „눈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동북아뿐만 아니라 지구촌 북반구 이곳 저곳에서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다. 남반구의 호주와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서는 기록적인 홍수와 „물 폭탄“을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그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우리 인류가 적절한 대응책을 화급하게 강구하지 않으면 반복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연말, 우리는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16차 유엔 기후변화 총회(COP16)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기대했었다. COP16이 만족스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기후변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만은 확인한 만큼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초 지구촌 기상이변, 지난해 말 COP16 등은 우리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이하 기후네트워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시사해주고 있다. 올해는 우리 한중일 환경NGO들이 기후네트워크를 발족시킨 이후 첫해다. 과거에 없었던 동아시아 네트워크 운동이 출항하는 해이기도 하다. 먼 길을 향해해야 하는 만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NGO들이 내실 있는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풀뿌리 시민참여의 기후보호 운동이 활성화된다면 네트워크 운동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또 우리 한중일의 기후네트워크는 각국의 일상적인 기후운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운동의 발판이다. 이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저탄소의 사회로의 전환,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도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저탄소 미래를 꿈꾸며 만들어가자는 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활동 방향이다. 올해가 우리 네트워크 활동 첫해인 만큼, 연초에 공동의 기후행동 슬로건을 정하고 한중일 시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존재와 활동소식을 전하는 이벤트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씩 서서히 전진해 나아갔으면 한다. 새해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NGO 성원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기후운동을 전개하기를 기원한다.

2011. 2

한국대표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일본대표 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 히로세 도시야
 중국대표 환우(環友)과학기술환경센터 리리

임낙평

廣瀬花

李力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이름뿐인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수요전망, 전력, 가스 등 주요정책 한꺼번에 공청회 진행

지난해 12월, 한국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3가지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샀다. 국가에너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수요전망“,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등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한 것이다.

특히 이들 정책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지역주민, 소비자단체, 학계, 지자체, 노동조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각각의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청회 때마다 논쟁이 되고 있어 다양한 토론과 토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이러한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8년 진행된 „에너지수요전망“ 관련 토론의 경우 수 차례 진행된 사전토론을 통해 다양한 논점이 제시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청회는 날치기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이들 정책을 12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이들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보다 계획추진에 더욱 관심이 있음을 더욱 방증하게 됐다.

2년만에 무려 13.4%나 증가된 에너지 수요 전망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정부가 예상한 에너지수요전망이 불과 2년 만에 무려 13.4%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2008년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에너지 수요증가분(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잡았다. 즉, 향후 온실가스 배출 수요 증가를 예측한 후 그 증가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제공=고수경/에너지관리공단

그러나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목표로 잡을 경우 향후 에너지 사용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들쭉날쭉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기 힘들다. 특히 에너지 수요전망을 부풀려 잡을 경우, 계산상론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도 생길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을 388.9 백만 TOE로 발표했다. 결국 환경단체들의 그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2008년 정부가 예측했던 342.8 백만TOE에 비해 13.4%나 증가한 수치다. 재미있는 점은 2008년 예측에 비해 2010년 전망에 사용된 GDP증가율은 낮아지고 국제유가는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GDP 증가가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에너지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정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08년 4.95 TOE/인에서 2030년 8.0 TOE/인으로 무려 61.6%나 증가하게 된다. 한국 국민은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를 지금보다 0.6배나 많이 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엉터리 예측의 배경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숨어있다. 에너지소비량을 부풀려 놓으면 정부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맞추기가 쉽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감축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탄은 유지, LNG는 반토막. 그 틈새를 노린 핵 발전



지난해 12월 7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한 국가 에너지, 전력수급, 천연가스수급 계획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이미지=에너지정의행동

전력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축소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의 사용은 줄인 채,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핵폐기물과 안정성 논란에 휩싸인 핵발전의 비중을 2011년 32.7%에서 2024년 48.5%, 2030년 59%로 늘리겠다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이다. 그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허상인 셈이다.

말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재론 "고탄소 회색성장" 이명박 정부는 그간 국내외에 자신의 에너지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 꼽으며 핵발전소의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각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고탄소 회색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꺼번에 열린 3개의 공청회는 저탄소와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생각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녹색성장'이 더 많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더 많은 핵발전소건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녹색'을 찾기 위한 한국의 시민사회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http://eco-center.org/>

대한민국, 핵의 도마 위에 오르다

원전 후보지 선정에 지역갈등 재점화... 곳곳 반핵운동 전개



지난해 12월 10일 해남관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핵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핵발전소 건설저지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미지=광주환경운동연합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해남, 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들 지자체 가운데 유치신청을 받아 최종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과거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되거나 핵 폐기장 부지선정에 맞서 반대운동을 펼쳤던 곳으로 이번 한수원의 결정에 강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해남과 고흥, 원전 후보지 선정에 지역민 "발끈"

한반도의 땅끝 전남 해남이 원전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보도에 지역민은 일제히 '발끈'했다. 해남은 이미 2차례나 원전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지역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부지선정이 취소됐던 곳으로 이번 한수원의 발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남관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핵발전소저지 해남군민연합'(이하 해남군민연합) 창립총회를 갖고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본격화했다. '해남군민연합'은 진도, 완도 등 인근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고, 읍면단위 지부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반핵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1만인 해남지킴이“를 통한 조직 강화와

„1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반핵 홍보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여론을 이끌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남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원전유치 반대의사를 공식화했고, 해남군은 지역의 반핵여론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전을 유치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청정해역 고흥은 „고흥민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1일 „핵발전소저지고흥대책위원회“를 발족, 지역의 반핵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158명의 발기인이 참여하는 발기인대회가 열렸으며, 이날 발기선언문을 통해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여론을 수렴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던 고흥군의회는 결국 7일 성명을 내고 “고흥의 장기적인 미래와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원전유치 반대를 공식화했다. 고흥군은 이로써 1982년 핵발전소 건설예정지로 선정됐지만, 군민들의 강한 반대로 1998년 핵발전소 부지해제를 이끈 이후 또 다시 원전건설이 무산된 지역이 되었다.

삼척·영덕, 계속된 원전유치선정에 지역민 „몸살“

강원 삼척의 '핵발전소유치 백지화투쟁위원회'(이하 원전유치백지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0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국의 반핵단체와 연대를 통해 핵의 위험성과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등 반대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이날 개소식에 참석, 삼척시의 핵발전소 및 핵 연구단지 유치계획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삼척시의의회는 지난달 14일 삼척시가 제출한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을 상정,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에 따라 삼척시의 핵발전소 건립문제는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석회암 지대인 삼척시가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삼척시의의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전유치백지화위원회“는 주민투표 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갖가지 탈·불법이 관내에 자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삼척시에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다.

경북 영덕의 반핵운동은 조금 특별하다. 한국 최초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일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의 축적으로 인해 정부는 1986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착수했고, 당시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영덕이 손꼽혔다.

그러나 지역민의 반대는 격렬했고 연일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1989년 3월 정부는 부지조사활동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 2003년 핵폐기장 후보지로 또 다시 선정된 영덕은 2년 후인 2005년에는 경주, 군산, 포항과 함께 방폐장 건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당시 영덕 관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읍면별 반핵 홍보전을 펼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갔고, 지역의 반핵여론을 이끌었다. 결국 핵 시설물은 영덕에 들어올 수 없었다.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말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동의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으며, 영덕군은 원전유치 신청서를 한수원에 최종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덕이 그간 보여준 반핵여론이 바닥 민심을 통해 서서히 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원전10기가 현재 가동 및 건설예정인 경북 울진군에서 최근 핵발전소 유치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울진 내 반핵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울진지역 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원전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원전유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수원에 구걸하다시피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군정"이라며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을 만드는 데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반발 점증...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절실

1980년대 이후 25년여 간 지속된 핵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군·민간 갈등과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핵 문제로 지역은 몸살을 앓아왔고, 찬반으로 나뉜 핵 문제는 지역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지역민의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경북 경주시 방폐장에 핵 방폐물이 처음으로 반입됐으나, „경주핵안전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방폐물 반입금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의회까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방폐물 반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정부는 핵에너지 중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확정한 뒤 2030년까지 현재의 36%인 핵발전 용량을 5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20기와 건설 중인 8기를 포함해 앞으로 10여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립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채 핵발전소만을 고집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지금의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는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핵 시설물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찬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습간사
<http://kwangju.kfem.or.kr>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으로 시민실천의 에너지 대안을 찾다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안을 찾는 전문기관으로 부산에는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약칭, 기후에너지센터)의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

4년째의 활동에 접어든 기후에너지센터는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대안으로 시민햇빛발전소를 3곳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민이 낸 자본금으로 건립한 시민햇빛발전소 중 특히 1호기는 부산에서는 민주화의 성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부산민주공원의 부지내에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민주화의 의미와 함께 기후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산형 에너지체제 실현을 위한 시민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차액 또한 학생들로부터 기후에너지문제에 대한 작품을 심의하여, '햇빛장학금'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년간 기후에너지센터는 단체결성과 교육강사 조직, 정책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이제 4년째에 접어드는 올해에는 명실공히 기후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 양성, 생태문화 해설사 과정 개설,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정책활동 기능 강화 등 사업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의 영남권 지역에서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려 한다.

기후에너지센터가 각종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는 이와 같은 활동의 종착점은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 시민이 올바른 방향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데 있을 것이다. 시민햇빛발전소의 설치는 물론이고 시민 주민의 실천운동으로서의 기후에너지운동에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태양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

노승조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정책실장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웹사이트
<http://sunway.or.kr>

지구온난화, 한반도를 끽끔 얼리다 기록적 한파에 시민들 발만 동동(冬冬)



북극이 아니라 한국이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의 모습. 이미지=연합뉴스

최근 기록적인 한파가 연일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끽끔 얼어붙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7.8도를 기록했으며, 부산의 경우 -12.8도까지 떨어지면서 1915년 이래 96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다.

올 들어 서울의 평균기온은 -6.2도로 평년보다 4도 가량 낮게 관측됐으며,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도 15일에 달했다. 사흘에 하루 꼴로 -10도 이하의 맹 추위가 기승을 부린 셈이다. 또한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에 확장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원인을 극지방의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내려온 가운데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한국 등 북위 30~60도의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기록적인 한파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냉장고 문을 열면 내부온도가 상승하면서 차가운 냉기가 아래쪽으로 흐르는 현상과 같다.

더욱이 시베리아는 물론 몽골 남동부까지 눈으로 덮이면서 대륙고기압은 더욱 강하게 발달하였고, 이 지역의 상층기온이 -4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기(寒氣)는 더욱 강력해졌다.

지구온난화로 날씨의 변동 폭이 커지고, 규칙성이 무너지면서 겨울철 강추위가 잦아지고,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는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기상청관계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 겨울 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한사온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온 자체가 너무 낮아 따뜻함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

문석훈 광주지방기상청 기후과

웹사이트 (일본어) <http://web.kma.go.kr/jpn/index.jsp>
웹사이트 (중국어) <http://web.kma.go.kr/chn/index.jsp>

为了实现低碳社会的转变



新年伊始，东北亚地区不断遭受极端的寒潮和暴雪天气。不仅如此，这个冬天整个北半球地区都不同程度的发生了气候异常现象。南半球的澳大利亚、巴西以及非洲等地也遭到罕见的洪水袭击。气象学家分析，全球变暖是导致这种气候异常现象的主要原因之一。

这表明，我们人类需要尽快做出适当的行动来改变现状，不然全球变暖和气候异常将会愈演愈烈。去年年末在墨西哥坎昆召开的第十六次联合国气候变化会议上（COP16），我们曾期待出台有关政策，从而改变气候危机。虽然会议最终没有实现这个目标，但是人们希望克服气候变化的意志却得到了共识，而且也会为实现这个目标不断努力。

年初的全球气候异常和去年末召开的气候大会指引了我们“东亚气候网”应该做什么。今年也是我们中日韩环境NGO联合起来的第一年，这也标志着前所未有的东亚联合运动即将起航。我们知道，我们要走的路很远，所以希望各个组织能够拿出实际项目参与到我们的活动。当每一个平民百姓都参与到气候保护活动时，我们的联合运动才能够更加活跃。还有我们中日韩联合网也需要共享气候活动相关的资料和信息，这将会成为我们的网络基础，也在这个基础上才能进行更加丰富多彩的活动。

降低对化石能源和核能源的依赖，实现低碳社会的转变，使用再生能源发展社会经济，让低碳社会成为现实是我们开展活动的目标。今年是我们付出行动的第一年，我们要共同建立口号，策划各种活动让中日韩国民进一步了解我们组织。最后，祝愿东亚气候网和参与活动的所有中日韩NGO成员身体健康，心想事成，也祝愿我们的活动蒸蒸日上！

2011. 2

韩方代表 光州环境运动联合会 林洛平
日方代表 东亚环境信息发展所 广濑俊哉
中方代表 环友科技 李力

인 로평 廣瀬俊哉 李力

东亚气候网

事務局：光州环境运动联合
Kwangju@kfem.or.kr

翻译

韓中：
金龙军, 于金卉, 吴东建

韓日：

石井晋平, 葛西 麻衣子,
原田静香, 全美惠

編輯 李志彦

促进低碳绿色成长 韩国政府徒有虚名

能源需求前景，电力，天然气政策三合一听证会

去年十二月，韩国政府将有关能源政策的三个听证会并到一个会议上进行的行为遭到了市民团体的抗议。国家能源政策中最重要的“能源需求前景”，“电力供给基本计划”，“天然气供给基本计划”会议合并成一个，举行了三合一形式会议。

这些政策不仅关系到环境团体，也涉及产业界、地区居民、消费团体、学术界、地方自治团体、工会等众多领域，不仅需要召开单独的听证会，更需要进行讨论和检讨，但是这次听证会上这些步骤全部被忽略掉。回顾2008年召开的“能源需求前景”研讨会，通过几轮会前讨论提出各种观点并进行深层次的探讨，最后召开正式会议相比，这次就显得大有缩水，难免遭到大众批判。

并且，政府以12月末公布为前提条件，形式上召开了此次听证会。李明博政府一向被指责缺乏与国民之间的沟通，通过这次事件，更让人们了解到政府只关心促进计划，置之不理国民呼声的态度。

能源需求前景两年内竟增加13.4%

相对形式召开听证会更为严重的问题是韩国政府提出的能源需求前景在短短两年时间里竟然增加了13.4%。2008年，政府不顾环境团体的反对把2020年温室气体缩减目标与能源需求增加比定在30%。也就是说，先预测温室气体排放量后再减少整个排放量的30%。但是，制定这种相对值对日后的缩减目标没有一个明确的参考



数据，实质性的节能减排也将很难实现。如果过大估计能源需求量，温室气体是减少了30%，但实际总排放量还是会超过往年标准。

除此之外，政府发表2030年能源需求量为3.889亿吨油当量。也就是说，环境团体一直担心的事情最终变成了现实。此次政府发表的数据比2008年预测的3.428亿吨油当量增加了13.4%，更有趣的是相比2008年的预测，2010年前景规划中使用的GDP增加率降低，而国际油价却上升了。一般来讲，GDP增加锐减的同时国

际油价上升的话，能源需求量也会相对减少，但是韩国政府的却逆道而行。如果根据上述数据进行分析，2030年人均油当量为8.0吨油当量/人，比2008年的4.95吨油当量/人竟增加了61.6%，这说明未来20年内韩国国民的能源需求会增加0.6倍。这种完全不合理的预测已经显现出政府对减排的消极政策。提高能源需求量，政府可以自由制定温室气体排放目标，同时不进行实际上的减排，最终也能达到缩减目的。

维持现状的煤炭，缩减一半的液化天然气，挤进来的核发展



仔细观察电力政策内容也会发现很多问题。根据政府议案，导致气候变化的主因——煤炭火力发电将从2011年的196,332GWh降低到2024年的188,411GWh，但减少量微乎其微；相比之下，环境友好型液化天然气火力发电将从2011年的98,

038GWh降低到2024年的59,201GWh，减少量达39.6%。

为了减少使用温室气体排放量相对较少的液化天然气，继续使用导致气候变化的煤炭火力发电的政策。不仅如此，因为核废料和稳定性问题一直处于争论状态下的核发展比重却从2011年的32.7%提升到2024年的48.5%和2030年的59%。李明博政府正在促进的这类能源政策是名副其实的虚假“绿色成长”。

表面上的“低碳绿色成长”，实际上的“高碳灰色成长”

李明博政府对国内外一直宣称自己的能源政策是“低碳绿色成长”，但是能源消费和温室气体排放量并线成长，而且增加引起环境问题的核能发电站的建设量，政府还以增加财政收入的名义促进核能出口。于是社会各界都批判李明博政府的“高碳灰色成长”政策。

去年12月召开的三合一听证会已经赤裸裸的揭露了政府所为的低碳绿色成长实质。没有人认为增加能源消耗和温室气体排放以及建设更多核能发电站来实现“绿色成长”，这也是为了寻求“真正的绿色”，韩国市民社会需要做出行动的理由。

李憲錫, 能源正义行动

<http://eco-center.org/>

大韩民国，岌岌可危

核电站候选地再次点燃区域矛盾，各地展开反核运动



去年12月10日，海南的30多个NGO举行《反对核电站建设的海南居民联合》的创立大会。

去年11月，韩国水力原子能把全罗南道高兴、海南，庆尚北道盈德，江原道三陟选定为核能发电站候选地，并从以上地方自治团体接收申请，最终决定两处建设核能发电站。不过这些地区曾经被选定为核能发电站或者核废料场，当地居民也展开过激烈的反对运动。所以这次选址决定也让很多居民再次表示强烈不满。

全罗南道海南，高兴成为核电站建设候选地后遭到地区居民强烈愤怒

朝鲜半岛的最南端，全罗南道海南市民听到本市被选定为建设候选地后都表示出了强烈不满。海南曾两次被选为建设候选地，但通过当地市民的努力后都得以取消。这次韩国水力原子能的发表也不例外，立刻遭到了强烈的反对呼声。

去年12月，海南地区30多个市民社会团体召开“反对

核发电站海南军民联合”创立总会，正式发起反对建设核电站运动。“反对核发电站海南军民联合”将增强珍岛、莞岛及周边地区联络，形成以邑面为单位的支部组织，系统展开反核运动。组合通过“万人海南守护使者”和“万人签名运动”宣传反核理念，带动地区舆论。通过不懈的努力，上个月19日海南郡议会正式表态反对建设核电站，还根据海南郡地区的反核舆论和议会决定，最终放弃了建设核电站的计划。

处于蓝色缓带的高兴以“高兴民主团体协议会”为中心创建了“抵制核发电站高兴对策委员会”，进一步提高了地区反核氛围。同月3日，由158名发起人参与的启动大会也同时召开，并通过启动宣言指出了建设核电站的诸多问题。通过多渠道努力，7日高兴郡议会终于听取地方言论，发表了“长期维持高兴清净形象才是最有价值的事情”，并正式表态反对建设核电站。高兴郡曾在1982年被选定为核电站建设地，但由于郡民的强烈反对，在1992年解除建设地。这也是核电站建设在同一地区连续两次遭到失败的案例。

江原道三陟，庆尚北道盈德连续申请核电站建设导致地区居民很无奈

去年12月20日，江原道三陟正式建立“申建核电站复原斗争委员会”并与全国其他地区反核团体联合，积极宣传核能危险性和建设核电站的危害性。当天，天主教原州教区正义和平委员会相关人士也参与大会，发表了反对建设核电站和核能研究基地的声明。

上月14日，三陟市议会接收并全票通过了三陟市提交的“建立原子能群——核电站申请同意案”，下一步将面临有关核电站建设的居民投票。对此，环境运动联合表示出“三陟市处于石灰岩地带，无法理解此处建立核电站的理由。”并强烈批判市议会的决定。同时，“申建核电站复原斗争委员会”表示，发现一些非法争取建设核电站的行为，而且正在蔓延至整个区域，这将会影响到将来举行的居民投票结果，对此组织人员也会做出相应的法律回应。“申建核电站复原斗争委员会”目前已提交建立核电站公开讨论会议案，希望通过会议让更多的人正确了解建设核电站的利弊与虚实。

庆尚北道盈德地区的反核运动比较特殊，因为这里是韩国史上第一个反对建设核废料场的地方。为了解决日益堆积的核废料，政府在1986年将盈德首选为建设候选地，但是遭到了当地居民的强烈反对和持续数日的抗议游行，政府最后在1989年3月全面终止了选地调查工作。2003年，盈德再次被选为核废料场候选地后经过两年时间，也就是2005年在庆州、群山、浦项等地实施了建设核电站居民投票。

当时，盈德地区的20多个市民团体组成核废料场建设反对对策委员会，以邑面为单位开展反核宣传、集会，带动地区反核舆论，最终导致核设施再次无法进驻盈德。盈德郡议会在去年年末通过了“新规建设地同意案”决议后盈德郡最终也把申请书提交到了韩国水力原子能。但是我们依然可以看出反对民心，逆流而上的政府行为最后还是会遭到挫折的。

另外，正处于10期启动建设的庆尚北道蔚珍郡也已经把建设核电站同意案提交到郡议会，导致蔚珍地区的反核舆论也迅速蔓延。上月31日，蔚珍地区市民社会团体联合发表声明，批判政府欺瞒市民，不顾市民生命安全同意建设核电站的行为，同时指责“向韩国水力原子能乞求提出申请的行径已经表现出疲软无能的郡政府”，并强烈要求政府为建设“生态文化，旅游城市”做出更多努力。

《地区的反对声逐渐增大——迫切需要政府态度的改变》

上世纪80年代以来，开始建设的核设施引起的居民之间的争论和分歧非常大，围绕核问题，居民或反对或支持，并激化成了地区纠纷。最近，庆州市的核废料处理厂进来了第一批核废料，“庆州核安全连带”为代表的NGO强烈主张，应禁止核废料的进入，庆州市议会也对此问题提出疑问。

2008年，政府确定以核能为重心的长期能源政策，目前为止，在总发电量中核电已占36%的水平，2030年之前，将扩大到58%，除了正在运转的20所和正在建设的8所核电站以外，还计划建设10所以上的核电站。在政府无法提出能源问题的根本性解决办法的情况下，只重视核电站的建设，存在巨大灾难的隐患，并将风险转嫁给子孙后代。如果政府坚持现在的核能政策，中央政府和地方政府之间、地域之间的纠纷可能加剧。政府应该认识到民众对核设施的反对声正越来越强烈。

鄭燦大, 光州环境运动联合实习干事

<http://kwangju.kfem.or.kr>



走向太阳的路 (社)气候变化应对中心

通过市民太阳能发电所的建立，
市民找到的能源实施方案。

为了找出对策来解决严重的气候变化,并寻求能源效率的专门机构(社),釜山市政府,气候变化能源对策中心(简称:气候能源中心)的出色表现非常引人注目。



连续4年的活动进入气候能源中心的气候能源问题的政策议题发掘并提示政策方向正确,但?实现大的作用。与此同时,可以实践市民的能源对策,市民阳光发电站,设置3处管理。市民的资本金,建立的市民阳光发电站中,尤其是在釜山的1号基地、民主化的象征性意义的釜山民主公园的用地内建立余青少年民主化的意义和一起气候能源问题的认识的体验场所使用。分散型能源体制旨在实现的市民阳光发电站中出现的发电差额也从学生气候能源问题的作品“审议阳光奖学金”的形式还原给社会。在过去的3年里,气候能源中心只有签署和教育讲师组织、政策性活动一直诚实履行,现在已经连续4年的今年,进入作为名副其实的气候能源专门机关的地位进一步巩固。为此,专门领导

人培养、生态文化和解腹泻课程开设、能源自立村、功能强化政策活动等事业的外延扩大更加深化质的飞跃。当然,网络和东亚时也就韩国的岭南地区的据点作用忠实地向前走。气候能源中心,各种事业的内部出现类似的活动的终点气候能源问题,市民正确的方向,并认识,但付诸实践。市民阳光发电站的设置,就连市民?居民实践运动的气候能源运动,会用尽全身力量,并信誓旦旦地说“走向太阳的路”。

盧承祚, (社)气候变换与能对案中心 政策主任

<http://sunway.or.kr>

地球温暖话，韩半岛全部都结冰 创纪录的寒冷，让市民们的脚都“冬冬”



最近破纪录性的寒流,随着韩半岛连日来不断冷却。据气象厅透露,17日,首尔早晨的最低气温为-17度,釜山的情况为-12.8度,创下了1915年以来,越过1996年,连续历史上最冷的日子。今年,首尔的平均气温为-6.2度,比往年高出4度左右,上月1日开始到16日-10度以下的日子也下降到了15日。持续着每三天内有一天的温度-10度以下寒冷天气。强烈的西伯利亚高气压也在扩张,

随着韩半岛全国性的暴雪天气增加。据气象厅预测,此次寒流的原因,极地的冷空气,东亚的情况下西伯利亚高气压的发达,北极的冷空气将韩半岛被挤到而至。地球变暖北极,随着该暖和北极的冷空气将韩国等北纬30~60度下山地区,随着破纪录性的寒流引发了。这就如同开门冰箱内部温度上升,冰冷的据说向下流淌的现象。该地区的上层气温比40度下降到气温是更加强大。地球变暖天气的变动幅度加大、规则性倒塌,冬天的寒冷天气越来越频繁,夏天酷暑持续的这种现象,在今后也会进一步深化。气象厅有关负责人表示:“灿大陆高气压的影响,气温大幅下降,今年冬天寒冷的天气,很多东西。”他还表示:“三寒四暖”延续的模式,但气温低本身过于感受到温暖的很难。

文碩勳,光州地方气象厅

(日语) <http://web.kma.go.kr/jpn/index.jsp>

(汉语) <http://web.kma.go.kr/chn/index.jsp>

低炭素社会への転換のために

年明けから、東北アジアに軒並み「記録的な寒波」と「豪雪」が続いている。東北アジアだけではなく北半球のあちこちで冬場の異常気象が発生している。

南半球のオーストラリアやブラジル、アフリカなどでは「記録的な洪水」や「暴雨」が起こっている。このような地球上の異常気象について、気象学者らは地球温暖化による気候変動がその要因の一つだと言う。

このような気象の異変は、私たち人類が地球温暖化や気候変動への適切な対策を可及的速やかに講じなければ、異変が繰り返され状況は悪化していく。昨年末、我々はメキシコのカンクンで開かれた「国連気候変動枠組み条約第16回締約国会議（COP16）」において、気候危機を克服しうる具体的な対策が出ることを期待していた。結果は、満足できる結論を出すには至らなかったが、気候変動を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を確認できた以上、今後たゆまぬ努力を注いでいかねばならない。

年明けの異常気象、昨年末のCOP16などは、我々「東アジア気候ネットワーク」が何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について示唆を与えてくれるものである。今年の日中韓環境NGOが「ネットワーク」を発足させたスタートの年である。過去には無かった東アジアネットワーク運動が出航する年でもある。長い道のりを航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け、ネットワークに参加している各NGOが内実の伴った気候行動プログラムを持つことが重要である。草の根レベルの市民参加の気候保護運動が活性化することで、ネットワーク運動も自然と活性化するであろう。また、我々日中韓のネットワークは、日常的に各々の気候運動に関連する資料と情報の交換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ネットワーク運動の足がかりである。この足がかりを土台にして、様々な活動を展開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化石エネルギーと原子力エネルギーへの依存を減らす低炭素社会へ転換し、再生可能エネルギーだけでも経済と社会の発展を達成できるという低炭素未来を夢見て向かっていこうというのが、我々のネットワークの活動の進むべき方向である。今年が我々のネットワーク活動のスタートの年であるだけに、年始に共同の気候行動スローガンを定め、また、日中韓の市民にネットワークの存在と活動報告を行うイベントも企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に、一步また一步と徐々に前進して行ければと考えている。新年、東アジア気候ネットワークとここに参加している日中韓NGOメンバーの皆さまの気候運動が、健康で活気あふれるものになるよう祈る次第である。

2011年2月

韓国 光州環境運動連合 イム・ナクピョン

日本 東アジア環境情報発信所 廣瀬稔也

中国 環友科学技術環境センター 李 力

●エネルギー気候政策

名ばかりの低炭素グリーン成長を 推進する韓国政府

去る 12 月、韓国政府は、国家エネルギー政策の中で最も重要な政策のひとつである「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電力需給基本計画」「天然ガス需給基本計画」など三つの公聴会を同時に強行し、市民団体の非難をあびた。

エネルギー政策をめぐる公聴会では、開催されるたびに論争になるため、様々な討議手続きが必ず必要である。2008 年に行なわれ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に関する討論では、数回行なわれた事前討論を通じて様々な論点が提示された中で公聴会が開催されており、今回の公聴会は、「不意打ちを食らった」との批判をかかわすことはできない。

韓国政府は、公聴会の開催理由について、これらの政策を 12 月末までに発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形式的な理由をあげている。李明博政権はこれまで国民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なっていないとの批判を受けてきたが、今回の一件で国民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よりも計画推進により強い関心を持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2年でなんと13.4%も増加した 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より深刻な問題は、韓国政府が予想し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がたった 2 年で 13.4%も増加したことにある。2008 年、政府は環境団体の反対を押し切り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を 2020 年エネルギー需給増加比 30%と決めた。今後の温室効果ガス排出需給増加を予測した後、その増加分の 30%を抑えるということだ。しかし、このような相対値を目標にするならば、今後エネルギー使用の増加によって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が変わり、実質的な温室効果ガス削減の達成は難しい。特に、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を水増しして決めた場合、計算上では温室効果ガスを削減したように見えるが、実際には温室効果ガス排出量が増えるという皮肉な結果が生じかねない。



また、政府が 2030 年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を 388.9 百万 TOE と発表した。2008 年に政府が予測していた 342.8 百万 TOE に比べ 13.4%も増加した数値で、興味深い点は 2008 年の予測に比べて 2010 年の見通しに使われた GDP 増加率は下がり、国際原油価格は更に上がったということだ。

一般的に GDP 増加が鈍化し、国際原油価格が上がれば、エネルギー需給が低下するのが正常なのだが、政府は正反対の結果を発表した。この結果によれば、韓国の一人当たりのエネルギー消費量は 2008 年で 4.95 TOE から 2030 年で 8.0 TOE になり、向こう 20 年間エネルギーを今より 1.6 倍も多く使うことになる。

このようなでたらめな予測の背景には、温室効果ガス削減に消極的な政府の政策が見え隠れしている。エネルギー消費量を水増しすれば、政府が自ら定めた温室効果ガス排出目標に合わせ易く実際温室効果ガス削減をしないまま、削減目標を達成したといえるからだ。

石炭は現行維持、LNG は半減 その隙間を狙って忍び寄る原子力発電

電力政策の詳しい内容を見てみると、多くの問題点を挙げることできる。

政府案によれば、気候変動の主な原因である石炭火力発電の場合、2011 年 196,332GWh から 2024 年 188,411GWh とほとんど変化がない一方で、石炭より CO2 排出量が少ない LNG 火力発電の場合、2011 年 98,038GWh から 2024 年 59,201GWh へと

絶対量 39.6%削減させる計画である。また、核廃棄物の処理や安定性に疑問のある原子力発電の比重を2011年32.7%から2024年48.5%、2030年59%に増やそうとしている。それこそ「低炭素グリーン成長」の虚像である。

「低炭素グリーン成長」は口先だけで 実像は「高炭素灰色成長」

李明博政権はこれまで国内外に自身のエネルギー政策を「低炭素グリーン成長」であると宣伝してきた。しかし、実際はエネルギー消費と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が共に増える方向に推し進めていて、原子力発電所の比重を増やし続けている。また、現政権は新しい経済成長の動力であるとして、原子力発電所の輸出まで推進している。状況がこれほどまでになると、李明博政権の政策は「高炭素灰色成長だ」と批判されている。

「グリーン成長」が、更に多くのエネルギーを消費し温室効果ガスを排出し沢山の原子力発電所を建設することだと思ふ人は一人もないはずだ。本物のグリーンを追求する市民社会活動が必要な理由なのである。

イ・ヒョンソク／エネルギー正義行動

原発候補地選定に地域対立再燃 あちこちで反核運動展開

昨年11月、韓国水力原子力(以下韓水原)は新規原子力発電所候補地として、「全南」、「高興と海南」、「慶北」、「盈徳」、「江原」、「三陟」を選定した。そして、これら地方自治体の中から誘致申請を受け、最終的に2ヶ所を選定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れらの地域は過去に原子力発電所や核廃棄場の建設地選定に対抗して反対運動を広げた所であり、今回の韓水原の決定に強い怒りを表している。

全南、海南・高興では

朝鮮半島の地の果て全南、海南が原子力発電所候補地に選ばれたという報道に住民は驚いた。海南はすでに2回も原子力発電所候補地に選ばれたう

えで住民の強い反対にあい、選定が取り消しになった所で、今回の韓水原の発表にすぐに反応を見せている。

昨年12月、海南にある30余りの市民団体は「原子力発電所阻止海南郡民連合」(以下、海南郡民連合)創立総会を立ち上げ、原発反対運動を本格化した。「海南郡民連合」は、珍島や莞島など近隣地域と連帯を強化し、市町村単位の支部組織を構成することで体系的な反核活動を展開した。また、1万人署名運動を通じて反原発キャンペーンを強化した結果海南郡議会は先月19日、原子力発電所誘致に反対する意志を公式に表明した。

高興では、昨年12月、「高興民主団体協議会」を中心とした「原子力発電所阻止高興対策委員会」を発足させ、地域の反核ムードを作り出している。地域世論を取りまとめた後に立場を明らかにするとしていた高興郡議会は、7日声明を出して「高興の長期的な未来と清浄なイメージを守り育てることがさらに貴重で大切だ」という結論に至った」として、原子力発電所誘致反対を公式表明した。高興郡は1982年原子力発電所建設予定地に選ばれたが、郡民らの強い反対で1998年原子力発電所建設地から解除された。高興郡はそれ以来再び原子力発電所建設が失敗に終わる地域となった。

慶北盈徳、江原三陟では

江原、三陟の「原子力発電所誘致白紙化闘争委員会」も昨年12月に事務所を開所して全国の反原発団体と連帯を通じて原発の危険性と原発建設に対する不当性を知らせるなど反対活動を本格化した。開所式にはキリスト教団体も出席、三陟市の原子力発電所および核研究団地誘致計画に反対して声明書を発表した。

一方、三陟市議会は先月14日、市が提出した「原子力クラスター構築のための原子力発電所誘致同意案」を全会一致で可決した。これによって三陟市の原発建設問題の行く末は住民投票に託された。また、環境運動連合では「石灰岩地帯の三陟市が原子力発電所候補地として議論されるのは理解し難い」として三陟市議会決定を批判した。また「原発誘致

白紙化委員会」は、住民投票計画が確定する前から投票に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各種の事故や不法行為が管内に強行されているとし、これに対して法的対応に出る計画だと明らかにした。同委員会では、現在三陟市に原子力発電所誘致に対する公開討論会を提案している。

慶北、盈徳は、韓国で最初に核廃棄場反対運動が起こった所である。1986年、政府は核廃棄場敷地選定に着手し、当時最も有力な地域の一つとして盈徳を挙げた。しかし住民の激烈な反対により、政府は敷地調査活動を全面中断するに至った。2003年核廃棄場候補地に再び選ばれた際には、2005年には廃棄場建設の是非について住民投票を実施するに至る。当時盈徳にある20余りの市民社会団体は核廃棄場設置反対対策委員会を構成して自治体別反核キャンペーンを広げて連日集会を続け、結局、核施設が盈徳につくられることはなかった。

盈徳郡議会は昨年末、「新規原子力発電所建設誘致同意案」を議決して通過させ、盈徳郡は原発誘致申込書を韓水原に最終提出した。しかし、地方自治体の意志にもかかわらず、反原発運動が起きていることは注目するに値する。

一方、10ギガワット級の原子力発電所が現在稼働し、さらに建設が予定される慶北、蔚珍郡では、最近原子力発電所誘致同意案が郡議会に提出さ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地域で反原発世論が急速に広がっている。蔚珍地域市民社会団体連合は、先月31日声明を発表、「住民たちの命を担保にして原発誘致を申請するのは郡民を欺瞞する行為」、「韓水原にもの乞いするように原発誘致を申請することで名分も実利もない郡政」と、原発誘致を強く批判した。

政府の前向きな態度が切実に求められる

1980年代以後25年余り続いた、核施設設置にともなう郡と住民の間の対立と後遺症は言葉に尽くせないほど深刻だ。原発問題で地域は疲弊し、賛否に分かれた核問題は地域対立に発展して、住民の疲労感は最高潮に達した。最近、慶北慶州市廃棄場に放射性廃物が初めて搬入されたが、「慶州核安全

連帯」など、地域の市民社会団体は放射性廃物搬入禁止を主張して強く反発している。さらに慶州市議会問題を提起して放射性廃物搬入にブレーキをかけた。

2008年、政府は核エネルギー中心の長期的なエネルギー政策を策定した後2030年までに現在の36%である原子力発電量を58%まで拡大すると明らかにした。現在稼働中の20基と建設中の8基を含め、これから10基以上の原子力発電所が追加で建設される計画だ。政府は、エネルギー問題に対する根本的解決方法は提示できないまま原子力発電所だけに固執することによって、次世代に途方もない災難と危険を負わせている。政府が今の原子力エネルギー政策を固執する限り、中央政府と地方政府そして地域間の対立はより一層強まるだろう。原発施設に対する住民の反発がますます大きくなっていることを政府は認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昨年12月10日海南管内の30ヶ余りの市民社会団体が集まって原子力発電所建設を反対して〈原子力発電所建設阻止海南郡民連合〉創立総会を開いている。

チョン・チャンデ／光州環境運動連合幹事



●団体紹介

気候変動エネルギー代案センター

深刻な気候変動問題に対応し、効率的なエネルギー代案を探す専門機関として釜山の「気候変動エネルギー代案センター」が注目されている。

4年目の活動に入った気候変動エネルギーセンターは気候変動エネルギー問題に対する政策課題を見つけ、正しい政策方向を提示・実現するのに大きな役割を担っている。また、市民が実践できるエネルギー代案として、太陽光発電による市民共同発電所を3ヶ所に設置して管理・運営している。

市民の出資で建設した市民共同発電所のうち、1号機は、釜山では民主化の聖地として象徴的な意味を持った釜山民主公園の敷地内に建設され、青少年らが民主化の意味とともに気候エネルギー問題に対する認識を高める体験の場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また、分散型エネルギー体制実現のための市民共同発電所から得られる収益を、学生たちから気

候エネルギー問題に関する作品を募集するための「日光奨学金」として社会に還元している。

過去3年間、センターは団体結成と共に教育や政策的活動を誠実に遂行してきており、4年目に入る今年は、名実ともに気候エネルギー専門機関としての地位をより一層固めていこう。このために、専門指導者の養成、生態文化解説士課程の開設、エネルギー自立の村づくり、政策活動機能強化など事業の外縁をより一層拡大して質的に深化していく予定である。もちろん東アジア気候ネットワークと関連しても韓国の嶺南圏地域での拠点の役割を充実させていこうとする。

センターの活動の終着点は、気候エネルギー問題に対して市民が正しい方向を認識し、これを実践に移すところにある。我々は、市民共同発電所の設置はもちろん、市民・住民の実践運動としての気候エネルギー運動に全力投球することを約束する。太陽へ向かう道に向かって…。

気候変動エネルギー代案センター政策室長
ノ・スンヂョ

センターホームページ <http://sunway.or.kr>



東アジア気候変動ニュース 創刊準備号 2011年2月

発行：東アジア気候ネットワーク（日本語版：東アジア環境情報発信所）

E-mail info@eden-j.org URL:<http://www.enviroasia.info/eaKIKO/>

発行責任者：廣瀬稔也／編集長：山崎求博／翻訳：石井晋平、葛西 麻衣子、原田静香、全美恵